

끝없는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해법은 없는가?

정재용
KBS 기자

체육특기자 제도와 대학스포츠, 시스템 오류의 전형

지난 2008년 스포츠계의 성폭력 문제를 취재하던 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학원 스포츠의 민낯을 경험했다. 여자 고등학교 코치가 제자들을 성폭행했는데도 학교와 학부모, 협회 모두 조용히 문제를 덮고 넘어갔다. 그 당시 만났던 한 관계자의 인터뷰는 대한민국 스포츠에서 대학 진학이 갖는 의미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간단한 거죠. 운동선수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잖아요? 운동만 하고... 그럼 취업할 데가 어디 회사가 아니잖아요? 대학 가고 실업 팀 가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덮은 거죠. 학교는 학교 대로 막으려고 하고 학교에서 터지면 교장부터 전부

다 모가지니까... 학부모들은 애들 경찰서 가고... 언론에 나고... 그런 애들 어느 대학 팀, 실업 팀에서 뽑아 주겠어?”

KBS 시사기획 씬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 보고서' 중

지난 2009년 어느 날 출근길이었다. 아침부터 다급하게 울리던 전화 속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정 기자님 우리 팀 해체됩니다. 살려주세요” 대학 스포츠 명문 건국대학교가 사실상 운동부 해체를 결정하고 앞으로 엘리트 선수들을 받지 않겠다는 정책을 공식 결정하려고 한다는 제보 전화였다. 그 날 KBS 스포츠 뉴스는 현재 대학 운동부 운영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건국대 스포츠 팀의 해체는 대학 스포츠 해체 도미노 현상을 몰고 올

이슈진단 및 분석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했고 결국 대학은 팀 해체를 유보했다.

당장 팀 해체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 간 한양대, 동아대, 성균관 대학 등 수많은 대학에서 똑같은 흥역을 앓았다. 대학 구조 조정의 압박 속에 재정적 부담은 크고, 홍보 효과는 없고, 입시 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대학 운동부는 여전히 구조조정 1순위다.

단언컨대 2015년 현재 대한민국 대학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비정상이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대학 엘리트 스포츠 팀은 외부 지원이 없다면 조만간 대부분 해체될 위기다. 말 그대로 생존의 위기다. 그것도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한 두 사람이 만든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근원은 시스템 작동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스포츠, 그 중에서도 대학 스포츠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시스템 개혁이 필수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제도과 시스템 자체를 고치려고 하기 보다는 눈앞에 닥친 지엽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 한다. 그런 땀질 처방은 시스템 개혁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학 스포츠 시스템 오류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불투명한 선수 선발 방식, 부족한 예산 그리고 비상식적인 대회 운영 방식 등 다양하다. 그 중 체육특기자 제도는 현재의 학교체육 시스템이 풀어야 할 근원적인 문제이다. 체육특기자 제도란 '체육에 특별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상급학교 입학 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로 1972년부터 시행됐다. 한 마디로 운동을 잘 하면 학업성적과 무관하게 대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운동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만

들어진 제도다.

1997년 이후 체육특기자 대학 진학 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34조 2항에 따라 각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합리적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보다는 선수 스카우트를 위해 검은 돈이 오가는 불법, 탈법의 온상이다. 지난 2012년 감사원의 학사운영 및 관리 실태감사 결과 보고서에 적발된 입시 비리 사례만 8개 대학 72명이고 스카우트 비용으로 오간 돈만 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학원 스포츠의 승부조작과 대학 진학을 둘러싼 암시장을 파헤친 KBS 시사기획 째 '코트의 마피아'를 취재하던 과정에서 만난 현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조용하던 한 지방 마을에서 아내가 남편을 청부 살해하려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아내의 우연한 증언 한 마디가 스포츠계를 둘러싼 불법 선수 암거래 시장의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부인: "제가 낳은 자식이 아니었어도 제가 10년 이상 키웠고 지방대 나온 사람하고 서울에서 명문대를 다니면 학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현금 1억 원을 주고 아들을 명문 00대 농구부에 부정입학시킨 사실을 자백했다. 부부는 아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에게 1억 원을 건넸다. 감독은 다시 당시 농구협회 심판 간사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 당시 심판 간사는 협회 핵심 파벌을 등에 업고 모든 경기에 들어갈 심판을 배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범죄행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가 재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법적 처벌을 받은 농구협회 심판 간사, 그리고 고교 감독, 대학 지도자 모두 자연스럽게 현장에 복귀했다.

○○고 감독: “대학 진학도 못 시키면 후배들이나 또 그 학부모들이 운동을 해도 대학을 못 가는구나 그렇게 되면 정말 팀 끌고 가기 힘들어요.”

- KBS 시사기획 씬 '코트의 마피아' 중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학교체육 비리의 핵심은 대학 입시다. 공부만 안 해도 대회에서 성적만 낼 수 있다면 체육특기자 제도를 통해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보니 협회 내 파벌 싸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그를 통해 심판진을 장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일단 권력을 잡으면 승부조작을 통해 고교 선수들의 대학 진학에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고교와 대학 감독들 그리고 협회 간부는 학연과 지연을 통한 선후배 관계로 끈끈하게 엮여 있다. 특히 한번 '작업'을 성공시키면 관련자들 사이엔 영원히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 비밀스러운 유대가 형성된다.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한 두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이 거대한 암시장을 허물겠다는 발상

은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그 증거는 끝없이 이어지는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한 야구 선수의 이야기는 체육특기자 제도를 둘러싼 비리가 여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교 시절 4할대 타율을 기록하며 각종 개인상까지 수상했던 유망주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니폼을 벗어야 했다고 한다. 더구나 대학에 3곳이나 합격하고도 고교와 대학 감독들의 비정상적인 담합으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야구 유망주에서 재수생으로 전락한 아들을 보며 절규하는 아버지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은 그래서 대학이다. 스포츠계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대학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초중고등학교가 먼저 정상화되길 기대할 수는 없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승부조작, 입시비리, 조직사유화, (성)폭력 등 이른 바 '스포츠계 4대악'의 근본 원인으로 '체육특기자' 제도를 꼽고 있을 만큼 부작용은 심각하다.

시스템 개혁, 희망은 있다

현재 대한민국 스포츠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환기를 지나고 있다. 대학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혁은 전체 스포츠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정책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변화의 큰 흐름과 구체적인 전략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고사 상태인 대학 엘리트 스포츠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지난 2012년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를 명시한 '학교체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법

이슈진단 및 분석

으로 정해진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경기 출전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를 통합시킬 것을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 이른바 '체육단체통합법'이 공식 발효됐다. 최저학력제도와 체육단체통합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의 구분은 사라지게 된다. 적어도 법적으로 '운동기계'만을 양산하던 '체육특기자'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됐다.

대학 스포츠를 총괄하게 될 행정조직도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대학스포츠 총장협의회는 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시비리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제정해 공식 발표했다. 미국 대학스포츠위원회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s Association)처럼 평점 C(0)를 받지 못한 학생 선수는 출전을 제한받게 된다. 또 수업 결손이 불가피한 학기 중 토너먼트 대회에 대해선 선수들의 참가를 제한하게 된다. 이미 이 규정에 따라서 대학축구연맹과 대학배구연맹 그리고 대학농구연맹은 학업병행이 가능한 홈앤드 어웨이 리그제를 도입했고 학기 중에 치르던 일부 토너먼트 대회를 방학 중으로 옮기기도 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인기 종목 대학운동부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 총장협은 올해 '중점육성종목 지원 사업'을 통해 총 42억 원을 지원한다. 물론 총장협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교육적 방식으로 팀을 운영하는 대학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이다.

초·중·고 엘리트 스포츠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

이 불고 있다. 지난 2009년 출범한 초·중·고 축구 주말리그는 5년여 만에 전체 엘리트 축구팀 숫자가 50% 이상 늘어나는 큰 성공을 거뒀다. 고교 야구도 주말리그로 전환했고 올 가을부터 중·고 농구도 학업 병행이 가능한 주말리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또 미국의 전국고교체육연맹 NFHS(National Federation of High School Associations)나 일본의 전일본고교체육연맹과 비슷한 가칭 '초·중·고 학교체육연맹'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가칭 초·중·고 학교체육연맹과 대학스포츠 총장협의회와의 공조 체제가 완성되면 학생 선수들의 학사관리와 진학관리를 선진국처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초·중·고 학교 스포츠클럽리그는 엘리트 선수 자원의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선진국형 선수 육성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2년 본격 시작된 학교 스포츠클럽리그는 불과 3년여 만에 참가선수만 42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의 리그로 성장했다. 서울시 체육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학교 스포츠클럽리그의 재능 있는 학생을 엘리트 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이른바 '전문형 학교 스포츠클럽' 창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학교 스포츠클럽과 엘리트 운동부의 결합은 조만간 선진국형 피라미드식 선수 육성 시스템이라는 열매를 만들어 낼 것이다.

- 학교체육진흥법 '최저학력제도'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단체통합법'
-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최저학력제도, 학기 중 토너먼트 금지

-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비인기종목 예산지원
- 초·중·고 종목별 주말리그 시행
- 가칭 초·중·고 학교체육연맹 신설 추진
- 학교 스포츠클럽리그 활성화

위에 언급한 리스트를 보면 대한민국 스포츠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형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가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체육특기자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열쇠, 정책공조

지금까지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총장협)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그리고 개별 대학의 적극적인 공조 체계가 없다면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은 뚜렷한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입시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체육특기자의 대학 입학과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교협이 특기자 입학전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대학의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전형 기준을 확정해 시행하게 된다. 체육특기자 선발은 대부분 특기자 특별 전형으로 분류된다. 이론상 교육부와 대교협 그리고 각 대학의 의지만 있다면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개선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체육특기자 제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사실상 방치돼 있다. 대학엘리트 스포츠는 교육부 업무가 아닌 문화체육

관광부의 업무라는 인식의 벽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정책 개입 의지가 부족했다.

그러나 지금은 스포츠라는 측면 뿐 아니라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미 관련법과 행정조직 정비, 그리고 초·중·고 현장의 변화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교육부와 대교협 그리고 대학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입시는 각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비교육적인 체육특기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적 의지가 특히 중요하다.

체육특기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주무부서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초·중·고 학교체육은 교육부 학교정책실의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대학체육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이다. 체육특기자의 대학입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정책실 산하 대입제도과와 대학에서의 체육 정책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대학정책과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분명한 업무 주체조차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 내부의 업무 조정이 마무리되면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총장협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일원화된 대학체육정책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된다. 스포츠와 교육 양 쪽 현장의 목소리가 고루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체육특기자 대학입시와 관련된 누적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대교협과 총장협의 공조가 이뤄진다면 학교체육진흥법 최저학력제도 관련 지침에 따라 체육특기자 입학전

이슈진단 및 분석

형 가이드라인에 경기실적 외에 내신과 수능점수를 반영시키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총장협과 대교협이 체육특기자 대학입시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준다면 개별 대학으로선 지침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선택의 문제

대학 스포츠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기회도 찾아왔다. 남은 것은 선택뿐이다. 변화를 거부하고 그대로 말라죽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힘을 짜내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과거 대학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나온 질문은 한결같았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있는가? 지역적인 개혁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 있는가? 그 때마다 정부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학계 누구도 정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엘리트 스포츠 경기인들은 변화를 선택할 수 없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된 전략도,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변화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변화를 위한 여건이 무르익었다. 시스템 개혁을 위한 법과 정책도 만들어졌고, 대학체육 파행의 근본 원인이었던 체육특기자 제도 개혁을 위한 실행 전략도 세워졌다.

물론 100% 성공이라는 보장은 없다. 여전히 개혁은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의 위험과 성공의 열매 그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누구도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 오직 대학과 대학 관계자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인들 스스로 답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필자소개

정재용 KBS 스포츠 기자

연세대학교 체육교육 /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미디어 스포츠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ABU) 스포츠 중계권 협상 부장을 역임했으며, 런던 올림픽과 소치 올림픽 대북 중계권 협상을 통해 북한에 올림픽 중계권을 제공했다. 현재 KBS 스포츠 제작부에서 '스포츠 코리아 새로운 시작' 캠페인 CP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 다큐멘터리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 보고서', '슬픈 금메달',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 '스포츠 대디', '스포츠는 권리다' 등이 있으며, 한국 스포츠 개혁의 대안을 제시한 비평서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를 저술했다. 한국 기자상, 관훈 언론상, 삼성 언론상, 한국 앰네스티 인권보도상 등을 수상했다.